정부는 고용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(flexicurity) 제고에 나서야 한다.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고용형태와 탄력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한 유연한 노동시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의 일자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재교육, 전직 지원, 고용 보험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. 나아가 기본소득, 로봇세(자동화세) 등 기술 혁신에 대응하여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정책 담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하여 일자리 상실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나가야 하며, 지식 수명주기의 단축에 대응할 수 있는 평생 학습체제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.